

평양시 열린 '정신대 공청회'

“정신대문제, 남북이 공동대응하자” 결의

“일본군 위안부 10만여명 한반도 전역서 동원됐다” 주장도



◀ 정대협의 이효재·윤정옥 공동대표가 북한의 초청을 받아 지난 5일 출국했다.

지난 7,8일 평양에서 북한측 정신대 관련 단체인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희생자 보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공청회’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이효재, 윤정옥 공동대표가 참석, 남북이 한

자리에서 정신대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남·북한, 필리핀의 ‘군사적 성노예 특별조사회’, 네덜란드의 ‘대일도의 청구재단’, 아시아 지역 국제법률가회(ICJ), 국제교육개발 동아시아 대표 등 피

해국 단체는 물론 조선인 강제연행 조사단 등 일본의 민간 단체들도 참석해 일본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북한측은 일본군 군대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1백50여명 생존해 있다는 것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단체의 통계를 기준으로 일본군 위안부 10만명 중 80% 가량이 한반도 전역에서 동원됐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인권문제에 관한 한 공소시효가 없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의 전쟁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재·윤정옥 공동대표는 출국전 인터뷰를 통해 “최근 유엔인권회의 등에서 중군위안부 문제와 강제 노동문제가 일제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에 대한 명

예회복과 보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데 공청회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여전히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고 동원과 관련된 명령체계나 동원된 인력의 현황, 인력 관리 등 진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북한 체류 동안 이 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성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 대표의 방북은 지난 9월 북한이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강정길 사무국장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통일원은 당초 북측의 초청에 대해 핵사찰문제와 맞물려 유보해오다 지난 2일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승인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7일 호소카와 일본 수상의 방한 중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해 “호소카와 수상이 ‘사죄’라는 발언 대신 ‘진사’라는 표현을 쓰고 불법적 침략전쟁 인정 대신 가해자로서 모국어 교육 박탈, 창씨개명, 중군위안부 강제 연행의 가해 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친 것은 아직도 한일 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방한이었다”고 평가했다. <김명순 기자>